

조선 vs. 한국의 전쟁과 평화: 6.25전쟁 이후의 긴 평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2016 초판2쇄])¹⁾.

김명섭²⁾
(연세대학교)

- 전쟁학(polemology)과 평화학(irenology)의 교차점

5천만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코리아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쟁터였고, 제1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에 휘말렸다. 그리고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자 냉전의 머리가 된 ‘끄트머리전쟁’으로서의 6.25전쟁을 겪었다. 이후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전면적 전쟁이 없는 ‘긴 평화’를 누려왔다.

1953년 6.25전쟁을 정지시킨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NLL, DMZ, 미귀환 국군 포로,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 피랍자/피난민/이산가족), 유해 반환, 한국군의 정전협정 당사자성과 기속성(羈屬性),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과 정전협정 간의 관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민주적 운용과 지속성,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평화적 역할,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무수한 쟁점들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모두 전쟁학과 평화학의 교차점들이다. 조선/한국이 전쟁과 평화의 교차하고 있는 공간이며, 조선인과 한국인 모두 전쟁과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6.25전쟁의 정전에 관한 연구

6.25전쟁의 개전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6.25전쟁의 정전과정과 그 결과 탄생한 정전체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책은 이러한 학문적 빈공간에 대한 응답의 성격을 지닌다. 6.25전쟁의 정전에 관해 널리 알려진 선구적 연구로 옥스포드대학

1)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국제학술지 *Geopolitics* 편집위원.

Rosemary Foot 교수의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 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정전협상 회의록과 영국과 미국에서 비밀해제된 1차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되기까지의 정전협상과정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한 고전적 역작이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저자 또한 영국의 공문서보관소(Public Record Office),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기념도서관(Harry S. Truman Presidential Library), 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Dwight D. Eisenhower Presidential Library), 미국 의회도서관 등에서 보관해온 문서들을 열람했다. 또한 케 도르세이(Quai d'Orsay)의 프랑스 외무부 문서고(Archives diplomatiques), 뱅센느의 프랑스 국방부 문서고(SHAT), 낭떼르 파리 10대학의 현대국제자료도서관(BDIC) 등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와 자료들도 활용할 수 있었다.

로즈마리 풋의 책은 소련해체(1991) 이전에 출간된 책이었기 때문에 공산권 문서들을 교차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리커농(李克農)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가 중국공산당의 특무공작을 책임졌던 ‘룡탄(龍潭) 3걸’ 중 1인으로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직통하면서 개성, 판문점, 그리고 제네바에 이르기까지 공산진영의 협상책임을 맡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공산권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개성과 판문점에서 정전협상을 지휘하던 리커농이 베이징의 저우언라이와 주고받은 교신내용이 공개되었다. 아직 중국공산당 문서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소련의 기무사 자료들을 포함한 많은 자료들도 아직까지 비공개상태이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정전협상회의록의 기록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정전체제 형성과정의 막전(幕前) 뿐만 아니라 막후(幕後)의 동학이 좀 더 정연하게 정리, 분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정전협상 회의록을 비롯한 다국적 1차 사료들과 후대의 2차 문헌들을 섭렵함으로써 1953년에 탄생한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성격과 그것이 결과한 ‘긴 평화’를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 역사정치학적 접근법

역사정치학이란 역사를 정치에 갖다 붙이는(attach)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사를 정치로부터 떼어내려(detach) 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6.25전쟁의 정전을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미래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 보다 ‘전(前)과거와 과거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는 전과거의 결과이지 현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6.25전쟁의 정전을 보지 못하고 전쟁 중에 죽어갔던 인간의 눈으로 “있던 그대로의 과거”(wie es eigentlich gewesen)를 보려는 노력도 소중하

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했는 지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다.

저자는 '평화를 위한 역사,' '통일을 위한 역사'처럼 현시(現時)적 대의(大義)를 내세우는 역사관에서 벗어나 다른 시간의 인간과 다른 공간의 인간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보편윤리적 선(善)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의(大義)에 사실을 종속시키는 역사는 역사의 가치는 물론 그러한 대의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대의를 내세우는 이분법적 목적사관은 역사의 흐름이 신국(神國)을 향해 '진보'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를 그러한 대의에 종속시켰던 중세유럽의 목적사관(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history)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대의는 소중하지는 역사는 있었던 그대로 쓰고, 가르쳐야 한다.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은 세계냉전의 축소판(microcosm)이다. 실체의 전모를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안경을, 미세한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돋보기안경을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 세계냉전의 기원은 1917년 2월 러시아의 짜르체제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케렌스키 사회민주정부를 쿠데타적 방법으로 전복시킨 볼셰비키정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치 독일로 대표되는 파시즘의 등장에 따라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은 지연되었다. 그러나 1945년 나치 독일과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을 상실했고, 서로가 '새로운 적'이 되었다. 이후 전개된 세계냉전의 역사는 마치 두 마리의 코끼리들이 충돌한 거대한 결투(great duel)에 비유할 수 있다. 냉전사를 다룸에 있어서는 코끼리의 꼬리만을 보면서 전체를 뱀과 같다고 보는 인식론적 틀을 벗어나 '전면적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공주의적 편향과 더불어 반(反)반공주의적 편향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 조선과 한국의 분립과 전쟁

1897년 대한국을 선포한 광무황제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명칭변화는 청제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적 독립을 추구했던 관념의 반영이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과거 중화제국 하의 조선처럼 일본제국 하의 조선을 만들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따라 한국에서 조선으로의 강제적 개칭(改稱)이 이루어졌다. 처음 일본이 한국 대신 생각했던 명칭은 일본 북쪽의 북해도(北海道)에 상응하는 남해도(南海道)였다.

이에 맞서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프랑스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았던 프랑스조계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되 '대한'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광복운동의 목표는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던 국가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던 동시에 그 내포를 제국이 아닌 민국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혁명정부를 전복시킨 볼셰비키정변을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공산주의의 영향과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 되었던 베르사유평화체제에 대해 가졌던 환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조선공산당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공산주의자들은 한국 보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한국독립당과 대립했던 조선민족혁명당도 한국의 광복이 아닌 '오천 년' 간 이어진 조선민족의 회복을 주장했다. 조선이란 명칭은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강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한국으로의 역사적 진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관을 응축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복국과 건국을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천명했고, 조소앙은 이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하려고 했던 한국민주당, 김구, 조소앙, 신익희 등의 한국독립당, 1919년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확신했던 이승만 등의 정치세력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의 주축이 되었다. 1948년 하나의 원형적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분립함으로써 조선과 한국의 관념적 분화는 확고해졌다. 38선 이북에는 '조선'이라는 관념과 인민민주주의가 결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선 이남에는 '한국'이라는 관념과 민주주의가 결합한 대한민국이 각각 수립된 것이다.

1948년 이후 특히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관념은 국가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재생산되었다. 1950년 1월 이범석 국무총리는 국무원고시 제7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6.25전쟁 발발 당시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던 화폐는 아직 조선은행권이었지만, 전쟁 발발 직후 한국은행권이 발권되었다. 조선인민군이 일으킨 6.25전쟁을 통해 '조선'과 '한국'의 분립이 확고하게 봉인되었다. 조선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을 '남조선,' 한국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을 '북한'이라고 호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따라서 똑같이 민족통일을 말할 경우에도 각각 조선민족³⁾의 통일과 한국민족의 통일을 이몽(異夢)하게 되었고, 자기중심적 흡수통일을 허망(虛望)하게 되었다.

- 관념충돌로서의 6.25전쟁

3)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주창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4년 김일성 사후부터 김정일의 주도로 '김일성민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김일성민족'이야말로 봉건적 '조선민족'이 근대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민족이라는 것이다. 1997년에는 조선어(한글)를 '김일성민족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6.25전쟁은 스탈린 및 마오쩌둥과 관념적으로 연대하고 있던 김일성과 박헌영 등이 지휘하던 조선인민군(북한군이 아니라)의 전면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1917년 레닌의 전복(顛覆)노선보다 1939년 폴란드와 핀란드를 침공했던 스탈린의 전쟁노선을 계승했다. 전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리고 그것이 발전한 제국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는 관념에 입각해서 김일성은 이 전쟁을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괴뢰도당”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신하고자 했다. 평양의 극소수 수뇌부를 제외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그런 관념에 입각해서 전쟁을 치렀고, 이러한 잘못된 기억은 지금까지 재생산되고 있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다”(There is nothing between war and peace)라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명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1953년에 수립된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평화인가, 아니면 전쟁인가? 정전은 전쟁에 가깝고,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끝내야 할 상태로 보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7.27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정전체제가 국제법적(de jure) 전쟁상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평화협정에 의해 평화가 시작되는 시점(始點)이 곧 전쟁의 종점(終點)이라는 유럽의 근대국제법적 전통에 충실한 생각이다.

그러나 정작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평화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 패전국 독일이 체결한 평화조약이 없는 유럽과 1951년 패전국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는 동아시아 중 어디가 더 평화로울까? 또 다른 평화협정의 패러독스는 베트남 평화협정이었다. 미국이 서둘렀던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 캄보디아에서의 ‘킬링필드,’ 그리고 1979년 공산주의국가들끼리의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북한군이 아니라)의 전면남침을 지시했던 평양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전쟁책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고, 개전사실조차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6.25전쟁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방어전쟁이었다고 믿는 관념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그들은 평화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평화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혹은 자신들의 전쟁을 평화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 시차(時差)가 보여주는 시차(視差, parallax)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으로 6.25전쟁은 아코디언처럼 전선이 요동치던 전면전쟁기(全面戰爭期) 대신 화전양면기(和戰兩面期)를 맞이했다. 정전협상은 군사령관들 간의 평화와 정전을 위한 협상이었다. 이것은 외교관들의 평화협상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서방기자들은 1951년의 여름이

가기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에서 파견된 중국공산당 측 인사들도 겨울옷을 지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두 번의 겨울을 더 보내고 새로 여름을 맞이한 1953년 7월 27일에야 발효될 수 있었다. 정전 이외의 문제들에 관한 협상은 1954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제네바정치회의로 미뤄졌다.

단지 전쟁을 정지하기 위한 협상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의 관념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우선 시간관념부터가 달랐다. 정전협상이 시작된 시각을 한국 국방부에서 공간된 『6.25전쟁사』는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정전담판’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기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가 있는 정전협상회의록에 따르면 쌍방은 약속시간을 정하면서, “우리의 시간”(our time)인가, 아니면 “당신들 시간”(your time)인가를 확인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5일 38선 이북의 새벽 4시는 38선 이남에서는 같은 날 새벽 5시였다. 평양에서는 6.25전쟁 이전이나 이후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당시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차(時差)는 6.25전쟁 개전 관련 자료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했지만, 국내외의 6.25전쟁 연구자들에 의해 간과되어 왔다.

서머타임이라는 생소한 제도로 인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존재하게 된 서로의 시차(時差) 이상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차(視差, parallax)가 존재했다.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서양국가들과는 달리 서머타임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과 달리 지역별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서로의 다른 시차를 반영하고 있다.

정전은 전쟁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전쟁의 광기를 요술램프 속에 미봉하는 것이다. 지나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정전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중립국에 소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산측 정전협상 대표들의 주장이었다. 국제연합 진영, 특히 한국의 이승만은 공산진영이 상정하고 있는 그러한 ‘정전의 시간’이란 결국 속전을 위한 전쟁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공산진영이 비행장을 복구하고 중철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 극구 반대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조선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전쟁은 정치적 이념은 물론 서로 다른 시간적 표준을 가진 문명권역(文明圈域)들 간의 충돌이기도 했다. 조선인민군 대표단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장 찰스 터너 조이(C. Turner Joy), 그리고 한국군 대표 백선엽이 개성에서 각각 서로 다른 시간관념을 갖고 만나는 장면은 조선/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die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 Ernst Bloch)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공간: 38선에서 NLL을 포함한 군사분계선으로

전통적 의미의 전쟁은 공간 장악을 위한 투쟁이다. 전쟁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생 속에 얻거나 잃은 공간을 재획정해야 했다. 정전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중요하다. 국제연합군 사령관 리지웨이(李奇微)는 당시 국제연합군이 장악하고 있던 원산 인근 해상에 정착한 덴마크병원선 위에서 정전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공산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개성을 선택했는데, 개성에서 정전협상이 시작됨으로써 개성은 공산진영의 공간으로 고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성이 정전협상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은 결국 정전협상 장소가 판문점으로 옮겨진 사실에서 반증된다.

판문점에서 양측은 공간재획정에 관한 의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전쟁이 일방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는 한 전쟁을 멈추는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전상태(戰前狀態, status quo ante bellum) 회복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점유지 보유(uti possidetis, ita possidatis)의 원칙이다. 공산진영은 전자의 원칙에 준하여 38선의 회복을 주장했고, 자유진영은 후자의 원칙에 따라 교전선에 따른 경계획정을 주장했다.

만일 자유진영이 38선을 회복하는데 동의했다면 공간재획정에 관한 합의는 빨라졌을 것이고 정전협상은 좀 더 일찍 끝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조금은 더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38선 이남에 있던 고도(古都) 개성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NLL문제가 회피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진영은 38선으로의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일단 이러한 결정으로 한반도 동부의 38선 이북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자유진영이 38선을 받아들일 경우 당시 38선 이북 서해의 압록강 인근까지, 그리고 동해의 두만강 인근까지 확보하고 있던 해상과 상공의 우위를 단번에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국제연합군 측의 조이 수석대표는 해군사령관으로서 이러한 3차원적 우위를 끝까지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육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이 합의에 이르게 되자 그에 따라 서해와 동해의 해군력을 후퇴시키면서 해면과 도서를 공산 측에 양보하며 형성된 선(線)이 NLL이었다. 군사분계선 이북(서해안과 동해안의 한국군과 국제연합군 등)과 이남(지리산 인근의 빨치산 등)의 무장세력은 각각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선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NLL이북의 무장세력은 이남으로 소개(疏開)되었고, 일부는 서해 5도에 정착했다. 지리산 인근의 빨치산들은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북으로 소개(疏開)되지 않았다. 당시 평양에서는 북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과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 간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평양정부는 남로당 계열의 빨치산들을 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 인간: 막전막후의 인간들과 포로가 된 인간의 교환 문제

정전협상 회의록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정전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공산 측의 썬파(解方), 덩화(邓华), 남일(南日), 이상조(李相朝), 장평산(張平山), 그리고 국제연합군 측의 터너 조이(C. Turner Joy), 헨리 호드스(Henry Irving Hodes), 로렌스 크레이기(Laurence Carbee Craigie), 알레이 버크(Arleigh Albert Burke), 백선엽(白善燁) 등의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에 의해 뒷받침된다. 아울러 양측의 막후에 있던 인간들에 대한 분석은 정전협상의 현장과 각국의 수뇌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정전협상에서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었던 것 또한 포로가 된 인간의 문제였다. 포로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미국은 '자유수호'라는 명분을 지키고자 했다. 자국의 포로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구하는 국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송환불원 공산군 포로들의 자유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감수했다. 10여명의 송환불원 미군포로들이 공산중국을 선택하는 것도 감수했다(이들은 결국 다시 미국땅을 밟았지만).

공산측 실무대표 남일과 국제연합군 측 실무대표 해리슨이 서명하는 장면은 정전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진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은 공산 측의 의도대로 연출된 것이었다. 공산 측은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목조건물을 급조했다. 현재 이 목조건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화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전협정조인장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석에는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영웅적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고 새겨져 있다. 1953년 3월 5일 정전에 반대했던 스탈린이 사망하자 공산진영은 정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전협정 체결장면을 "미 제국주의자와 이승만 괴뢰도당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승리의 장면으로 연출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정전협정에서 보여지듯이 정전협정은 전장(戰場)의 최고사령관들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팡더화이(彭德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등의 서명이 최종적인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해서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승만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마오쩌둥이나 아이젠하워가 서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전협정은 군 최고사령관이 서명하는 협정이기 때문이었다. 한국군 사령관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게 이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군 사령관 퍼싱은 서명하지 않았고,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프랑스의 포쉬(Ferdinand Foch)가 대표로 서

명했다. 1954년 제네바정치회의가 열렸을 때도, 공산측은 한국의 정전협정에 대한 당사자성을 부인하지 않았었다.

- 평화체제 만들기: 정전체제의 양기(揚棄, aufheben)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구성된 정전체제는 1차적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부활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6.25전쟁을 통해 60만대군으로 성장한 한국군의 복진통일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도 결합되어 있었다. 이 정전체제가 6.25전쟁 이후의 '긴 평화'(long peace)를 가능하게 했다.

6.25전쟁 이후 탄생한 조선/한국 정전체제는 독일재무장과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이중봉쇄를 특징으로 했던 유럽의 냉전체제 보다 더 복합적인 삼중봉쇄체제(三重封鎖體制)였다. 이렇게 볼 때, 코리아 평화체제는 조선/한국 정전체제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정전상태를 보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상태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상이 자칫 정전 대신 속전(續戰)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정전체제의 불완전한 '긴 평화'를 보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체제에 대한 이상이 평화협정에 대한 맹신으로 왜곡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이 따뜻한 평화(溫和)보다는 못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열전보다는 나았듯이 코리아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보다는 못했지만 인민민주주의자들이 일으켰던 6.25전쟁이나 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침략전쟁과 같은 열전보다는 나았다. 따라서 영구적 평화체제를 향한 이상은 조선/한국 정전체제의 맹목적 폐기가 아니라 그것의 보전(conservation), 폐기(abandon), 그리고 초월(transcend)을 포괄하는 양기(揚棄, aufheben)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